윤장현 전 시장 피해액 출처 조사하나

보이스피싱 피해 4억5000만원인데 올 재산 총액 변동은 적어
수사 관계자 "아직 피해자 신분…자금 출처 조사 확정된 것 없다"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 시장 재직 시절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광주일보 11월 23일자 6면〉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피해액 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

수사 당국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자금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 (윤 전 시장은)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며 수사확대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광주지검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시장 재직 때인 지난해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 밝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올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권양숙 여사가 아닌 광주에 거주하는 휴대전화 판매원 A(여·49)씨였다. 전과 6범으로 알려진 A씨는 이후 다른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지난 19일 전남경찰청으로부터 A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배경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윤 시장이 재직시절 4억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점을 들어 자금출처 등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 전 시장이 A씨에게 돈을 보낸 시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이용섭 현 광주시장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천 등을 염두하고 돈을 보냈다면 사기 피해 사건일지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내 세력이 약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았지만, 주변에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는 게 지역 정가 관계자들의 말이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데, 권 여사께서 자녀문제로 어렵다고 해 급히 돈을 보낸 것"이라며 공천 대가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금출처에 따른 김영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다.

일각에선 윤 전 시장이 4억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과 토지 등을 담보·매각했다는 설과 딸 축의금 등으로 마련했다는 말 등이 나온다. 특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건넸다는 말도 떠돈다.

일단 가정사와 관련된 축의금설은 확인되지 않은 '떠도는 얘기'일 뿐이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7월 자신의 둘째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은 물론 하객참석 등도 사절했다. 당시 광주시는 윤 전 시장 딸 결혼식은 피로연 없이 200여명의 하객이 모여 '작은 결혼식'을 했다는 내부자료를 내놨다. '김영란법'상 공직자는 축·조의금을 1인 기준 5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아파트, 토지, 부동산 담보·매각설도 서류상으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총 6억948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2017년 3월 대비 1억 2772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아파트나 토지 등은 변동이 없었으며, 예금은 1500만원 정도 감소했다. 반면 빚인 은행권 채무는 1억5700여만원이 늘어난 2억1400만원을 신고했다.

단순계산하면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에서 올 1월까지 현금 4억 5000만원을 사기당했다는 점에서, 은행권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억원이라는 돈의 출처가 애매하다. 윤 시장은 지난해 3월과 올 3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자신명의 예금으로 3억여원을 신고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은 현금화가 쉽지 않은 생명·손해보험·증권 등이다.

또 총액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윤 전 시장의 서류상 공식재산에서 A씨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은행권 채무 증가액인 최대 1억 5700만원이다. 수사 관계자는 "수사확대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있으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 출장비 유용·횡령 수사

경찰, 복지건강국 자료 검토
광주시도 내부감사 돌입

광주시 일부 공무원이 출장비를 허위 신고하고 횡령했다는 내부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 집행내역 등을 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복수의 부처에서 출장비를 유용하고 있다'는 내부 제보를 입수한 뒤 출장비 유용·횡령 등에 관련한 내용을 수사 중이다.

일각에선 공직사회에서 출장비를 유용해 개인은 물론 국·과·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관례화돼 있다는 말도 나온다.

광주시도 자체적으로 내부감사에 들어갔다. 평소 공직자의 청렴을 신념으로 여겨온 이용섭 광주시장이 경찰수사와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엄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관련자 소환 등에 나설 방침"이라며 "수사상황에 따라 타 부서 등 전반적인 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로 보복원정 온 수도권 조폭 무더기 검거

광주지역 폭력조직원에게 맞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조직폭력배 수십명이 보복을 하러 광주에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5일 이모(23)씨 등 서울·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30여명 중 12명을 폭행,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달아난 20여명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11시께부터 2시간여 동안 광주시 북구 각화동의 한 모텔에서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신양OB파 소속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 2명은 이날 새벽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광주 폭력조직원에게 맞았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다른 조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 등은 신양OB파 폭력조직원의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광주로 내려왔다가, 친목도모를 위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얼굴 등을 구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연락을 받은 수도권 폭력조직원 30여명은 이날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각화동의 한 모텔로 집결했다. 이들은 화해를 위해 찾아온 A씨에게 오후 3시 인근에서 열리는 결혼식장을 찾아간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조직원들을 때린 신양OB파 조직원들을 데려 오라고 협박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원 60여명을 동원, 모텔을 급습해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이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근로정신대 1차 손배소 29일 대법원 선고

양금덕(87)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25일 대법원, 광주지역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1차 청구소송의 판결을 내린다.

지난 2012년 10월24일 양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쓰비시측이 지난 2015년 7월 상고한 이후 3년이 넘은 지난달 10일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안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재판의 쟁점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대법원 상경단을 모집해 피해 할머니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에 제기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과 2015년 제기된 3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각각 다음달 5일,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파업에 멈춘 배송차량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 주차장에 파업중인 CJ대한통운 배송차량들이 물건을 실은 채 주차돼 있다. CJ대한통운이 파업중인 노조와 교섭 대신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염전노예' 국가 배상책임 추가 인정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강모씨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녀 앞 불 지르려한 가장 집유

부부싸움 뒤 10대 자녀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하며 가족을 위협한 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남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2시께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다투다가 10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자"며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어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을 붙이려는 자신을 붙잡고 말리는 자녀의 어깨를 밀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동차 부품 운송 지각했다며 입사 4일차 후배 폭행

쌍나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력업체 소속 30대 남성이 '사전 연락도 없이 물품 배송을 늦게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를 내세워 후배 직원에게 손찌검을 했다가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24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기아차 제2공장 하역장에서 입사 4일째를 맞은 후배 직원 B(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

○…후배 B씨는 정해진 시각보다 40여분 늦게 짐을 싣고 왔다가 선배 A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에서 A씨는 "후배 B씨가 연락도 없이 늦었는데도 '밥먹느라 늦었다'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자 화를 내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 /김용희 기자 kimyh@